

화재 피해 정부시스템 87개 정상화... 복구율 10%대

1등급 시스템 복구율 58.3%
정부24·무인민원발급 정상화
중대본 '일부시스템 복구지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오전 10시 기준, 전

체 647개 중대본 시스템 가운데 87개(13.4%)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 중 1등급 업무 시스템은 36개 중 21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58.3%에 달한다.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의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피해가 집중된 5층에는 7·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는 200개, 화재가 직접 발생한 7-1전산실에는 96

개, 8전산실에는 34개의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전체 피해 시스템의 절반 이상인 330개(51%)가 해당 구역에 들어 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 시스템은 재가동 중이며, 5층 7-1 전산실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스템은 본인 제거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구센터 이전과 민

간 협력을 통해 복구를 추진 중"이라며 "다만 일부 시스템은 다수 기관과 연계돼 있어 복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주안등록, 인감, 여권 등 국민께서 자주 많이 활용하는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거래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부 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기로 처리하는 등 불편은 존재한다면서 "행안부는 지자체 전담지원단을 구성해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시스템 복구와 대체수단 안내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중대본은 647개 장애 시스템의 전체 목록과 함께 복구 현황 및 가능한 대체수단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해 나

갔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bo.co.kr

자격미달자 채용 지시·예산 유용 권익위, 국토부 산하기관장 적발

6000만원 사적으로 사용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채용비리와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이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장 A씨는 지난 2024년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과 경력에 미달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해당 인력의 급여 인상을 위해 인사 규정을 개정할 뒤 이를 소급 적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관 예산 약 6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급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마실 와인을 구매하기 위해 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한편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bo.co.kr

건보정수금 채납자 명단 공개 개인·법인 58명... 총 1742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이득 정수금을 채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채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담이득금을 1년 이상 채납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개인 53명(1586억 2100만원), 법인 5곳(156억 1700만원) 등 총 채납액이 1742억 3800만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 채납액이 1096억 9000만원, 약국이 645억 4800만원이다.

이대유 기자 nice@siminibo.co.kr



'내란반조' 재반 출석한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무머리 반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유인 성매수 시도 20대 체포

온라인 채팅앱에서 알게 된 중학생을 성 매수 목적으로 유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매수 유인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경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중학생 B양을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성 매수를 목적으로 채팅앱에서 알게 된 B양을 찾아가 유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연행했으며 체포했다.

김포=윤선익 기자 mcs@siminibo.co.kr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2913명 검거... 108명 구속

대규모 6건 범죄조직직 적용
23명에 징역 10년이상 중형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2024년 9월에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한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의 결과로, 국토부

는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경향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가짜·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전법 중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발이 어려운 일대, 농지 등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해 1487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경향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2024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갑부' 수법을 이용한 보종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물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두고 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적용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등 다양한 수법에 조속적인 법적 검토와 공소 유지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은 전세사기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으며,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부터 8월을 활용한 전세사기 우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보강으로 조사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한호 기자 mmh@siminibo.co.kr

수소·CNG버스 5.5% '안전 불합격'

교통안전공, 2만2099대 점검
연료 주입구·가스누출 등 다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5~8월 전국 수소 및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마을버스 2만 2099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1219대(5.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불합격 사유로는 연료 주입구 관련이 534건(3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스 누출 509건(37.4%), 작동 불량 190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점검 후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가스 누출 항목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한 뒤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수회사 차량 관리 담당자 5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미수검율을 0%대로 낮췄다.

또한 전국 198개 CNG 충전소 중 폐쇄, 미사용 등 상태인 충전소를 제외한 169곳(85.4%)에 검압 충전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국토교통부, 제작사, 운수회사 등과 이반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대유 기자 nice@siminibo.co.kr

지자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최대 2.2배 격차

'정부권고 충족' 전국 53곳 뿐
서초구, 月 66만원으로 최다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지자체별로 최대 2.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우영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 통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권고를 충족해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223개 시·군·구 중 5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는 만 7세 미만 34만원, 만 7~13세 45만원, 만 13세 이상 56만원의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서울 서초구로, 서울시 관

할 24개 구는 모두 정부 권고에 맞춰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지만 서초구의 경우 구비를 활용해 연평균 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13세 이상의 아동은 월 66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부산, 경북 전체 시·군·구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위탁아동에게 동일하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만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최대 금액을 지원하는 서초구와는 2.2배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모든 위탁아동이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책임 강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을 비롯한 주요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국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여경준 기자 yyy@siminibo.co.kr

희망을 선순환합니다

善

인천대학교 만원릴레이 안내

만원릴레이는 대학발전기금으로 1만원을 기부하고 그 기부가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를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후원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대학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캠페인 → 만원릴레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fund.inu.ac.kr>

☎ 032-835-8080

인천대학교 발전기금